

KMI 동향분석

VOL.141
2019 AUGUST

발간년월 2019년 8월(통권 제141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최재선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협력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양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 현재 11.9% 영향, 지속되면 23.0%로 증가 -

박광서 해양수산통계센터장

(kspark@kmi.re.kr/051-797-4722)

최석우 해양수산통계센터 전문연구원

(schoi@kmi.re.kr/051-797-4777)

김정우 해양수산통계센터 전문연구원

(jwkim@kmi.re.kr/051-797-4775)

김태한 해양수산통계센터 연구원

(thkim@kmi.re.kr/051-797-4783)

박일란 해양수산통계센터 전문사무원

(1ran@kmi.re.kr/051-797-4782)

일본이 7월 4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소재 3개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8월 7일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 개정안에 추가규제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언 제든 규제품목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양수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양수산 분야를 8 개로 나눠 270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는 $\pm 5.78\%$ 포인트이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평균 11.9%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수산물 생산업(23.3%), 항만업(17.1%), 수산물 유통업(12.9%) 순으로 높았으며, 국제물류업(6.7%), 해운업(7.5%), 조선 및 기자재 제조·수리업(8.0%)은 평균 이하를 보였다. 업체 규모별로는 중견기업(13.8%)과 소기업(11.5%)이 대기업(5.6%)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향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23.0%로 현재보다 2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항만업(34.1%), 수산물 생산업(30.0%), 수산물 가공업(25.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별로는 대기업(27.8%)이 중견기업(20.7%)이나 소기업(23.6%)보다 높았다. 대기업의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이 현재 시점에서는

적으나 장기화된다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응답한 업체(62개)를 대상으로 기존 대비 매출액 감소 비중을 물어본 결과, 10% 미만인 45.2%, 10~30% 미만인 33.9%를 차지했으며, 평균적으로 14.3%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수산물 가공업(44.6%), 수산물 생산업(25.0%), 해양수산물관광업(14.3%), 조선 및 기자재 제조수리업(10.8%) 순으로 매출액 감소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 업체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감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평균 5.3개월로 나타났는데, 전혀 감내할 수 없다는 업체도 24.2%를 차지했다. 업체규모별로는 소기업 4.9개월, 중견기업 5.2개월, 대기업이 9개월로 규모가 작을수록 오랜 기간 동안 규제를 감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업체의 자체적인 대응책(복수응답)으로는 거래선 다변화(20.0%), 대체상품 개발 및 R&D(19.3%), 여유자금 확보(11.5%), 투자 및 인력 확대(10.7%), 긴축경영(5.2%) 순이었으나,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64.8%에 달해 아직까지 해양수산 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희망하는 대응책(복수응답)으로는 경영안정자금 등의 자금 지원(27.4%), 신규기술 및 판로개척 등 컨설팅 지원(25.2%), 규제 및 절차 개선(24.4%), 세금징수 유예 등의 세제 지원(23.0%), 산업 관련 정보 제공(14.4%) 순이었으며, '없다'는 응답은 39.3%로 조사되었다.

한편, 한일 정기선을 운항하거나 일본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업체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업체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55.6%까지 증가했으며, 매출액 감소 비중은 44.0%,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로 조사되었다. 이들 업체들은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 지원 요구가 전체 평균 대비 2.4배인 66.7%에 달했다.

해양수산 업체들은 대체로 외교와 대화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빨리 풀어줄 것과 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 세제 및 자금 지원, 중소기업 상품 구매 등의 지원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기술 개발, 규제완화, 친 기업 정책 추진, 정치와 외교 분리, 환율 안정화, 경기활성화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산업여건을 개선해 줄 것도 바라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 갈등은 갈수록 확대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해양수산 분야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직간접적 영향은 물론 앞으로 피해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수시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양수산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단기적인 지원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동향과 품목

■ 7월초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의 추가 조치로 불확실성 고조

- 일본의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할 경우 기존에 일본에서 수입 시 적용되던 포괄허가제도¹⁾가 폐지되어, 식품 및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수입품목이 개별 허가 대상으로 변경되므로 수출심사, 허가여부 등에 따른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차질이 불가피함
- 포괄허가제도 폐지에 따라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대체 공급처 확보 부담 및 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국내 기업의 수출제품 생산에도 차질이 우려됨
- 8월 7일 시행령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추가규제는 없었으나 언제든 규제품목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라고 할 수 있음

표 1. 일본의 수출규제 주요 경과

일자	주요 내용
7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경제산업성의 반도체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계획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핵심소재 3종 :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적용), 포토레지스트(반도체 기판 제작),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반도체 세정) ■ 일본의 '화이트 국가 리스트 한국 제외' 의견 공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이트 국가 : 일본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수출입 우대 대상 국가. 미국, 영국 등 27개국 포함 (한국은 2004년 포함)
7월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 시행
7월 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수출 규제' 관련 실무진 협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과장 2인), 일본(경제산업성 과장 2인) - 장소 :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 1031호실
7월 2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논의 ■ '한국 화이트 국가 제외 계획' 철회 촉구 의견서 일본정부에 제출 ■ 일본의 '화이트 국가 리스트 한국 제외' 의견 공모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만 여 의견 중 약 90% 찬성
7월 25~2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일 3국 의원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정세균 국회의장 등 여야 국회의원 7인 참석 - 장소 : 미국 워싱턴 D.C. 의회의사당
8월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국무회의에서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결
8월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
8월 28일(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포괄허가제도 : 최초 포괄 허가받은 이후 3년간 개별 수출품목에 대한 허가가 면제되는 제도

■ 일본의 수출규제 적용을 받는 해양수산 분야 전략물자는 총 53개로 대부분 선박 관련 기기 및 장비

-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대상인 15개항 1,120개 품목 중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품목은 총 53개²⁾로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선박과 관련된 기기 또는 장비에 해당함
- 12항(해양)에는 잠수정, 제어장치, 관측장치, 프로펠러, 매니플레이터, 엔진, 연료전지, 부력재, 잠수장비 등 총 31개 품목이 포함됨
- 10항(센서)에는 수중탐지장치, 수중음파탐지기, 청음기 어레이, 신호처리장치, 전기장 센서 등 11개 품목이 포함됨
- 그밖에 9항(통신)에 수중통신시스템, 11항(항법장치)에 수중음파탐지기 항법장치, 13항(추진장치)에 선박용 가스터빈 엔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15항(민감 품목)에 수중청음기, 유무인 잠수정 등 8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음

표 2. 수출규제 대상 해양수산 분야 전략물자 현황

통제품목 분류		품목 수	주요 품목
관련항	품목 분류		
9	통신	1개	수중통신시스템
10	센서	11개	수중탐지장치, 음향해저탐사장비, 수표면 선박시스템, 수중음파탐지기, 청음기 어레이, 수중음파센서, 수중 전기장센서 등
11	항법장치	1개	수중음파탐지기 항법장치
12	해양	31개	유인잠수정, 무인잠수정, 잠수정 부분품, 잠수정 자동제어장치, 수중관측장치, 프로펠러, 전기추진기관, 전동축, 프로펠러 장치, 선박용 방음장치, 사이클엔진, 디젤엔진, 연료전지, 부력재, 잠수장비 등
13	추진장치	1개	선박용 가스터빈엔진
15	민감 품목	8개	수중청음기, 청음기 어레이, 신호처리장치, 수중탐지장치, 유인잠수정, 무인잠수정 등

자료 : 전략물자관리원(일본 통제품목)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정리

■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피해 발생이 불가피

- 수출규제 품목은 전략물자 등 ‘제품’에 국한됨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에서 상대국 제품 불매운동과 관광 보이콧 등으로 이어져 산업 전반으로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즉 해운업, 항만업, 국제물류업, 해양수산관광업 등 비제조업 분야는 직접적인 수출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피해 발생이 불가피함

2) 15개 항 중 12항(해양)에 포함되어 있거나 선박 또는 수중설비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군용은 선박 관련 품목이라 하더라도 제외(6개)하였음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양수산 업계에 미치는 영향

■ KMI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내 해양수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가 원하는 정책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목적)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나라 해양수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정부 요구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지원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음
- (조사대상 및 규모) 해양수산 8개 분야 총 270개 사업체
 - * 조선 및 기자재 제조·수리업, 해운업, 항만업, 국제물류업, 수산물 생산업,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유통업, 해양수산물관광업
- (조사기간) 2019년 8월 14일~8월 21일
- (조사방법) 전문조사기관(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한 전화조사
- (조사내용) 일본의 수출규제에 의한 영향 유무, 업체에 미치는 영향, 매출액 감소 정도, 감내 기간, 수출규제 대응책, 정부 정책지원방안, 기타 애로 및 건의사항

표 3. 설문조사 대상 및 규모 현황

대분류		중분류	
분류명	목표치	분류명	조사치
조선 및 기자재 제조·수리업	50	선박 건조 및 수리업	10
		선박 및 해양플랜트 부품품 제조업	10
		해양기자재 제조업	10
		수산기자재 제조업	10
		해양수산물기자재 수리업	10
해운업	40	해운업	40
항만업	40	항만업	41
국제물류업	30	국제물류업	30
수산물 생산업	30	수산물 생산업	30
수산물 가공업	20	수산물 가공업	20
수산물 유통업	30	수산물 유통업	31
해양수산물관광업	30	해양레저관광업	11
		수산물레저관광업	10
		해양리조트업	7
합계	270	합계	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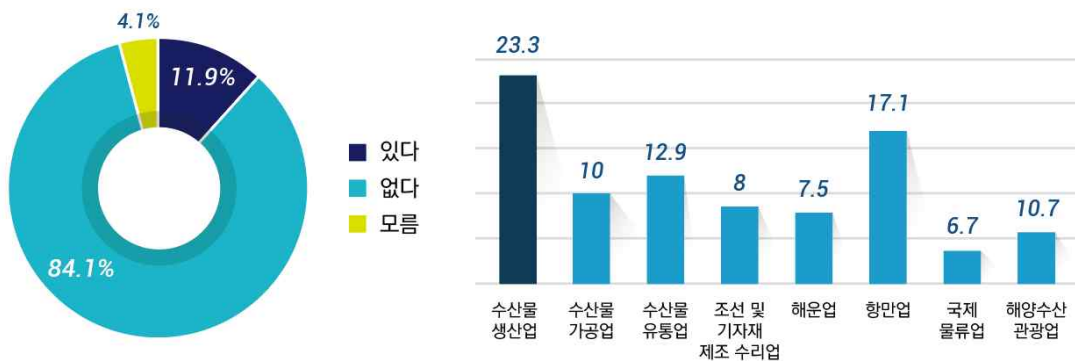
주 : 응답률은 34.0%였으며,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는 $\pm 5.78\%$ 포인트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해양수산 업체는 11.9%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조사 시점에 이미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업체는 11.9% 수준인 반면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84.1%, 모름은 4.1%로 나타남
- 해양수산업 부문별로는 수산물 생산업(23.3%), 항만업(17.1%), 수산물 유통업(12.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제물류업(6.7%), 해운업(7.5%), 조선 및 기자재 제조·수리업(8.0%) 등은 평균 이하를 보임
- 업체 규모별로는 중견기업(13.8%), 소기업(11.5%), 대기업(5.6%) 순으로 나타남

그림 1.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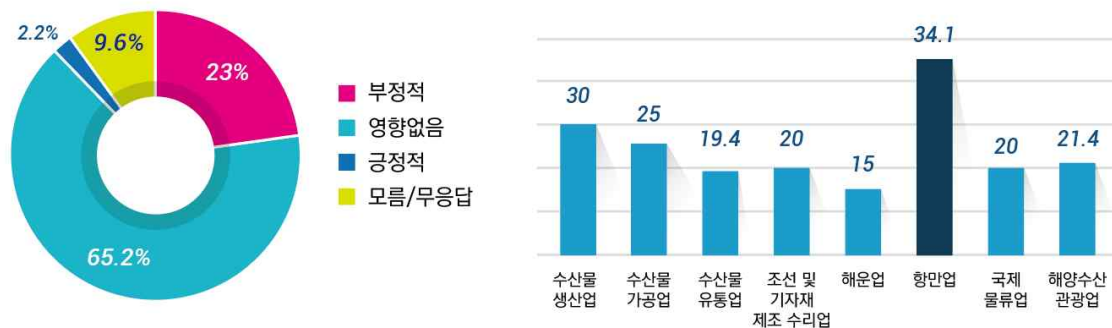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향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 업체는 23.0%로 현재 상태보다 2배 정도 증가

-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향후 직·간접적 영향에 대해 응답업체의 23.0%는 ‘부정적’(매우 부정적 3.3%+다소 부정적 19.6%)으로 응답하였고, 65.2%는 ‘영향 없음’으로 응답함
- 해양수산업 부문별로는 항만업(34.1%), 수산물 생산업(30.0%), 수산물 가공업(25.0%), 해양수산관광업(21.4%) 순으로 ‘부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27.8%), 소기업(23.6%), 중견기업(20.7%) 순으로 나타나, 대기업의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가 현 시점보다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향후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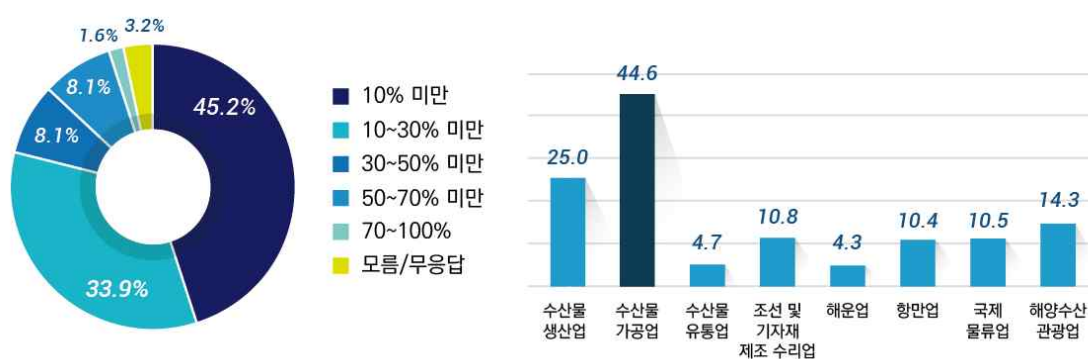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받는 해양수산 업체는 평균적으로 14.3%의 연간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응답한 업체(62개)를 대상으로 기존 연간 총 매출액 대비 매출 감소 비율을 물어본 결과, 10% 미만(45.2%), 10~30% 미만(33.9%), 30~50% 미만(8.1%)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수산물 가공업(44.6%), 수산물 생산업(25.0%), 해양수산관광업(14.3%), 조선 및 기자재 제조 수리업(10.8%) 순으로 매출액 감소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업체 규모별로는 중견기업(18.3%), 소기업(13.3%), 대기업(7.0%) 순으로 나타남

그림 3.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기존 연간 총 매출액 대비 매출 감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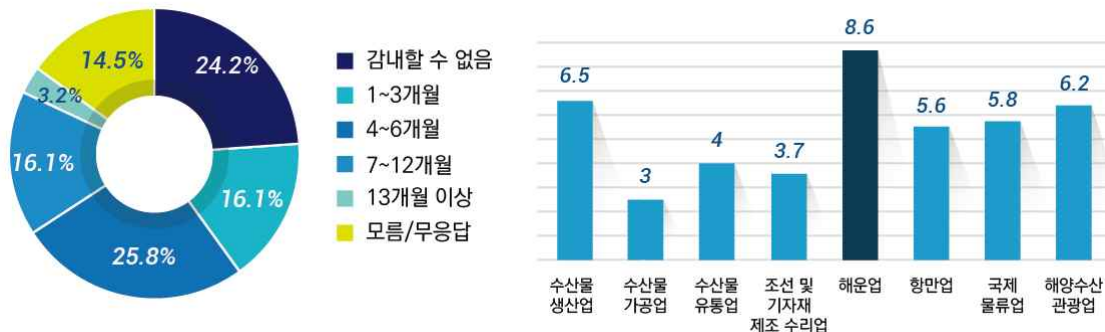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감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평균 5.3개월

-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응답한 업체(62개)를 대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감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조사한 결과, 4~6개월(25.8%), 감내할 수 없음(24.2%), 1~3개월(16.1%), 7~12개월(16.1%) 순으로 나타남
- 해양수산업 부문별로는 수산물 가공업(3.0개월), 조선 및 기자재 제조·수리업(3.7개월), 수산물 유통업(4.0개월) 순으로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것으로 조사됨
- 업체 규모별로는 소기업(4.9개월), 중견기업(5.2개월), 대기업(9.0개월)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4.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감내할 수 있는 최대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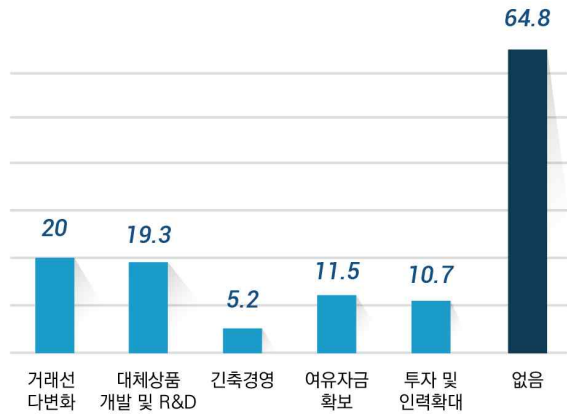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업체의 자체적인 대응책으로는 거래선 다변화와 대체 상품 개발 및 R&D 추진, 정부 대응책으로는 경영안정자금과 각종 세제 지원 등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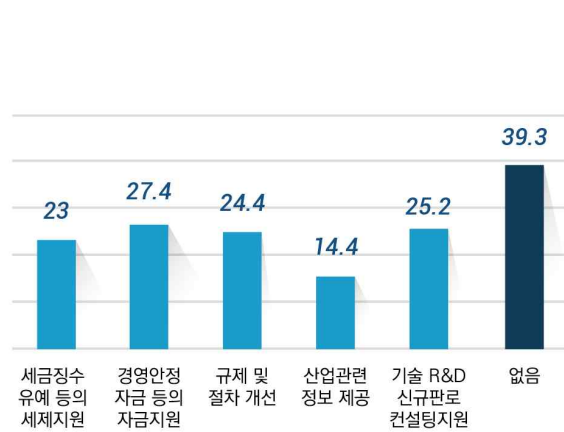
- 업체의 자체적인 대응책(복수응답)으로는 거래선 다변화(20.0%), 대체 상품 개발 및 R&D (19.3%), 여유자금 확보(11.5%), 투자 및 인력 확대(10.7%), 긴축경영(5.2%) 순으로 나타났으나, ‘없다’는 응답이 64.8%에 달해 해양수산 업계의 대응책 마련은 매우 미흡한 수준임
- 정부에 희망하는 대응책(복수응답)으로는 경영안정자금 등의 자금 지원(27.4%), 신규 기술 및 판로 개척 등 컨설팅 지원(25.2%), 규제 및 절차 개선(24.4%), 세금징수 유예 등의 세제 지원(23.0%), 산업 관련 정보 제공(14.4%) 순으로 나타났으며, ‘없다’는 응답은 39.3%로 조사됨
- 한편 해양수산 업체들은 대체로 외교와 대화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빨리 풀려줄 것과 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 세제 및 자금 지원, 중소기업 물건 우선 구매 등의 지원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함
- 또한 국내 기술 개발, 규제완화, 친기업 정책 추진, 정치와 외교 분리, 환율 안정화, 경기활성화 등 거시적 관점에서 산업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바램

그림 5.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책(복수응답)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림 6.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희망하는 대응책(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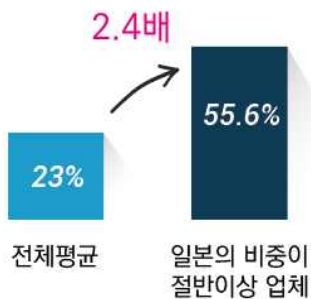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일 정기선을 운항하거나 일본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업체는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영향이 크게 증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구가 큰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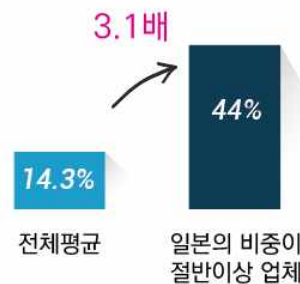
- 매출액 또는 수출수입액의 일본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9개)는 수출규제가 지속되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 평균(23.0%) 대비 2.4배인 55.6%까지 증가함
-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매출액 감소 비율도 전체 평균(14.3%)에 비해 3배를 넘는 44.0%로 증가하고, 반면에 감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4.0개월로 감소함
- 이들 업체들은 대정부 희망사항으로 경영안정자금 등의 자금 지원요구가 66.7%로 전체평균(27.4%) 대비 2.4배 수준임

그림 7.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향후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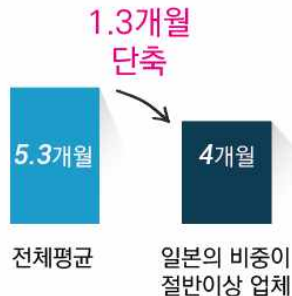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림 8.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기존 연간 총 매출액 대비 매출 감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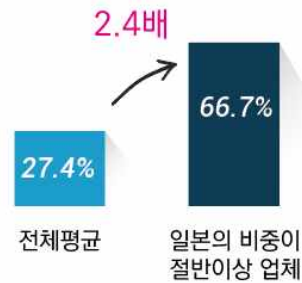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림 9.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감내할 수 있는 최대 기간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림 10.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 지원 요구 비중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현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정책지원방안 모색 필요

■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내 해양수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나 장기화될 경우에는 피해가 커질 우려 상존

- 일본의 수출규제 전략품목에 해당되는 해양수산 분야의 품목은 총 53개로 4.7%에 해당하며, 선박 관련 기기 또는 장비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조선 및 기자재 제조수리업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아님
- 또한 현재까지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11.9%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 * (사)벤처기업협회가 7월에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벤처기업 현장 체감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0%를 상회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23.0%로 올라가고, 이들 기업의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에 감내할 수 있는 기간도 중소기업은 6개월 미만, 대기업도 9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해양수산 업계의 자체적인 대응책이 없다는 응답이 64.8%에 달해 현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

■ 국내 해양수산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지원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

- 현재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품목에서 빠져있지만 언제든지 규제대상이 될 수 있고, 해운업, 항만업, 국제물류업, 해양수산물관광업 등과 같이 비제조업 분야로써 수출규제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야라 하더라도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기업 차원에서는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자구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자금 및 세제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중소기업의 상품 구매 등 지원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야 하며, 원천기술 확보, 규제 완화, 환율 안정화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현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수시로 해양수산 업계의 실태 및 애로사항, 정책지원 요구사항을 모니터링 실시하여 현장의 실정에 맞는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부록

해양수산 분야 수출규제 대상 전략물자 현황

통제품목 분류	통제 품목
9. 통신	수중통신시스템
10. 센서	수중 탐지장치
	음향 해저탐사 장비
	해저 지형탐사를 목적으로 하는 수표면 선박 시스템
	수중음파탐지기(a)
	수중 물체 및 위치 탐지 장치
	수중음파탐지기(b)
	해저용 또는 항만 케이블 용 청음기 어레이
	해저용 또는 항만 케이블 시스템 용으로 설계한 신호 처리 장치
	가속도계를 가진 수중음파센서
	선박용 대지 속력 측정장치
	수중 전기장 센서
11. 항법장치	수중 음파 탐지기 항법장치
12. 해양	유인식 잠수정
	무인식 잠수정
	1,000미터가 넘는 수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잠수정의 부분품
	잠수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자동제어장치
	잠수정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설계한 자동제어장치
	광섬유 압력 선체 관통구
	잠수정에 탑재하고 원격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 또는 개조된 수중관측장치
	외부 물체에 가한 힘 또는 토크 또는 외부 물체와의 촉각을 측정하는 센서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제어하는 것
	비례 주종기법 방식으로 제어, 동작 자유도가 5 이상인 로봇
	가변 피치 프로펠러 또는 허브로, 정격 입력이 30MW를 초과하는 것
	내부 액체냉각식 전기 추진 기관으로, 출력이 2.5MW를 초과하는 것
	초전도식 추진 기관 또는 영구자석을 이용한 전기 추진 기관으로, 출력이 0.1MW를 초과하는 것
	복합 재료를 이용한 전동 축 장치로, 2MW 이상의 출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것
	선박용 프로펠러 장치
	배수량이 1,000톤 이상의 선박에 사용할 수 있는 방음장치
	프로펠러의 추진력의 향상 또는 그 수중 소음의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발산식 노즐 또는 정류 배인 관한 기술을 이용한 장치
	수중에서 물체를 화수하기 위한 장치로 항법 장치에 의해 설정한 점에서 20m 이내의 범위에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자동 선 위 유지 장치가 있는 것
	수중에서 물체를 화수하기 위한 장치로 1,000m 이상의 수심에서 미리 정해진 지점에서 10m의 범위에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
	Flash법을 이용한 것으로, 1회 플래시 당 에너지가 300J을 초과하는 가운데, 1초에 5회 이상 발광할 수 있는 것
	아르곤 아크를 이용한 것으로, 1,000m 이상의 수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
	외부 물체에 가한 힘 또는 토크 외부 물체까지의 거리 또는 외부 물체까지의 촉각을 측정하는 센서로부터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어되는 매니퓰레이터
	구조 재료 티타늄 합금 또는 섬유 강화 복합 재료를 이용한 것으로, 250N 이상의 힘 또는 250Nm 이상의 토크로 작업 할 수 있는 것
	브레이튼(Brayton), 랭킨(Rankine) 사이클 엔진
	대기로부터 차단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젤 엔진
	출력이 2kW 를 초과하는 연료전지
	대기로부터 차단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테링 사이클 엔진
	수관(water tunnel)으로서 추진 장치 주위의 유체흐름에 의해 발생하는 음향장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주파수범위 0~500Hz에서 100dB (1μPa, 1Hz 기준) 미만의 배경소음을 가진 것
	1,000m 초과 수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부력재
	밀도가 561kg/m³ 미만인 부력재
	폐쇄회로식 또는 반폐쇄회로 식의 수중유영 잠수 장비

해양수산 분야 수출규제 대상 전략물자 현황

통제품목 분류	통제 품목
	초음파를 이용하여 잠수부의 활동을 방해하는 장치로서, 음파가 200Hz 이하의 주파수에서 음압이 190dB 이상이되도록 설계한 것
13. 추진장치	선박용 가스터빈 엔진
15. 민감한 품목	수중 청음기
	견인 수중청음기 어레이(Towed acoustic hydro phone arrays)
	견인(towed) 음파 수중청음기(하이드로폰) 어레이용으로 설계한 신호처리장치
	해저 또는 베이(bay) 케이블 수중청음기(하이드로폰) 어레이 장치
	해저 또는 베이(bay) 케이블 시스템용으로 설계한 신호처리장치
	송신 기능을 가진 수중 탐지장치
	유인식 잠수정
	무인식 잠수정

주 : 일부 중복되는 품목이 있으나 HS코드가 서로 상이하하여 다른 품목으로 인식

자료 : 전략물자관리원(일본 통제품목)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정리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든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 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첨병! 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구분	제목	발간일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업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회의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제67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구분	제목	발간일
제78호	전국 해양수산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 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06.14.
제88호	수산양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2018.06.20.
제89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2018.06.27.
제90호	빅데이터 분석은 해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2018.07.04.
제91호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2018.07.11.
제92호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 협력 필요	2018.07.18.
제93호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2018.07.25.
제94호	김 재고 증가, 과잉생산 대책 마련 시급	2018.08.01.
제95호	해양바이오 기술사업화 정책지원 강화해야	2018.08.14.
제9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지원제도 강화해야	2018.08.29.
제97호	IMO 전략계획을 수용한 정책 수립과 이행성과지표를 구축해야	2018.09.05.
제98호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2018.09.21.
제99호	중국 진출 화주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정부 지원책 모색 필요	2018.10.02.
제100호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도입으로 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해야	2018.10.17.
제101호	군 경계철책 철거 전 사전 대비 필요	2018.10.31.
제102호	우리나라 정가선 해운업계,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보다 적극 대비해야	2018.11.07.
제103호	해양강국 위해 한국해양법연구소 설립해야	2018.12.12.
제104호	우리나라 극지진출 40년, 미래 30년을 위한 극지 비전 수립 - ‘2018 북극협력주간’ 성공적 개최와 세계최초 ‘2050년 극지비전’ 선포	2018.12.19.
제105호	블록체인의 확산과 해운물류분야의 대응	2019.01.02.
제106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 ‘2019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자상 중계-	2019.01.18.
제107호	2020년 황산화물 규제 시행 대비 해운부문 체계적 대응 필요	2019.01.30.
제108호	“국민회갑 광어”, 소비 다변화 등 생존전략 마련해야	2019.02.13.
제109호	한·일관계 개선 위해 일본의 자세 변화 필요	2019.03.08.
제110호	수산업관측사업 성과와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	2019.03.13.
제111호	특별법 이행을 위한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정비 시급	2019.03.23.
제112호	2019년 중국 ‘양회’, 해양수산 관련 이슈 봇물, 항만비용 인하와 행정간소화 조치 에 주목 필요	2019.03.27.
제113호	‘국민 80%, 해양이 국가발전에 기여’ -KMI 2019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2019.04.17.
제114호	선박연료유 공급선박 벙커링 효율성 제고해야	2019.04.25.
제115호	4.27 판문점선언 1년, 해양수산 남북협력 점검과 과제	2019.04.30.
제116호	주요국 해양정책 동향과 시사점 - 해양기반 성장전략 다시 만든다. -	2019.05.08.

구분	제목	발간일
제117호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국산 대체로 생산어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듯	2019.05.09.
제118호	해양수산 혁신사례 공유로 지역혁신성장 촉진	2019.05.15.
제119호	해양관련 국제기구, 글로벌 해양이슈 협력강화 논의 - 2019 글로벌 오션레짐 컨퍼런스 -	2019.05.24.
제120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북극이사회와 우리나라 북극협력 방향	2019.05.29.
제121호	미-중 무역전쟁이 해운·항만에 미치는 영향	2019.06.13.
제122호	사평문화 정착을 통한 해양터져 활성화	2019.06.13.
제123호	어업작업 안전재해 감소 대책 시급 - 관련 제도 및 조직 정비 필요-	2019.06.18.
제124호	유조선 파격이 해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2019.06.28.
제125호	친환경 선박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 후속 조치 필요	2019.07.03.
제126호	북한 노동신문 키워드 분석으로 본 해양수산 분야 시사점	2019.07.16.
제127호	대서양 연어 위해우려중 지정 유지에 따른 양식업계 대응 방향	2019.07.17.
제128호	섬 가치 제고, 접근성 개선과 고유자원 관리가 관건 - KMI 국민 섬 인식조사 결과 -	2019.07.17.
제129호	해양공간기본계획 7월 말 시행 - 지역사회 인식 증진과 역량 강화에 투자해야 -	2019.08.01.
제130호	항만도시 고용창출을 위한 항만배후지역 풀필먼트센터 구축 시급	2019.08.02.
제131호	현대상선의 얼라이언스 가입 의미와 향후과제	2019.08.02.
제132호	일본의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전략과 시사점	2019.08.05.
제133호	해양수산업 총산출액, 전 산업 9위 - 재도약을 위한 성장 전략 필요 -	2019.08.09.
제134호	한국 수산물 수출기업 성장 모멘텀 발굴 - 해외 글로벌 수산기업 사례로 본 -	2019.08.16.
제135호	한일 간 무역전쟁, 공급사슬 위험관리에 성패 달려 -해외 공급자 다변화 및 국내 대중소기업간 공급사슬 생태계 구축 등 대책 필요-	2019.08.16.
제136호	2018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전년대비 소폭 감소	2019.08.20.
제137호	국제해사기구(IMO), 2030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新추진연료(화석 연료-OUT) 개발 및 사용을 의미	2019.08.22.
제138호	중국 항만시설사용료 추가 인하가 우리 항만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9.08.23.
제139호	2분기 해양수산 업황 여전히 어려우나 3분기 점진적 개선 기대 - 해양수산업 경기실사지수(BSI) 발표 -	2019.08.28.
제140호	항만(부산항 등)-대륙철도 해륙복합운송으로 유라시아 지역 물동량 유치해야	2019.08.29.

URL: <https://www.kmi.re.kr/>